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김정은, 김일성군사종합대 연구원 건설현장 시찰(1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교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김정일군사연구원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북한은 작년 10월 인민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존의 대학연구원을 김정일군사연구원으로 개칭하고 개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중앙통신은 김정일군사연구원 건설 사업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黨 위상 강화나선 北, 이번엔 노동당 찬양가 띄우기(11/24, 연합뉴스; 노동신문)**
 - 당(黨)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화해온 북한 김정은 체제가 최근 노동당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만들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이 지난 19일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라는 노래의 가사와 악보를 게재한 후 북한 매체는 연일 고위간부를 앞세운 각계 반응을 쏟아내며 '신곡 알리기'에 힘쓰고 있음.

■ 김정은동향

- 11/18,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18,중방)
- 11/18,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전체 노동계급에게 감사 및 선물 전달(11.18,중방)
 - 감사 전달모임, 11.17 최룡해(총정치국장) 참가下 진행
 - 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이 '생산공정 현대화로 생산문화·생활문화가 확립되었다'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었다"고 선전(11.18,중통)
- 11/20,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 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 시찰(11.20,중통·중방·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황병서·마원춘(黨 부부장) 동행
- 11/21,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꾼대회,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도 밑에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1.21,중통·중방)
 - 최룡해(개회사), 김원홍, 김수길, 럽철성, 조경철(보고)을 비롯한 무력기관 지휘성원들과 모범적인 보위일꾼들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 관람 및 기념촬영(11.21,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지도('73.11) 40돌 기념보고회, 11.19 태종수 (함경남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함흥대극장에서 진행(11.20, 중방)
- 김일성 저작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발표 55돌 즈음 '사상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당과 인민에게 있다'고 강조(11.20, 중통·노동신문/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나. 경제

● 北 "손노동 없애자"...공장 '무인화' 선전(11/1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빵과 당과류 등을 생산하는 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이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실현했다며 "현대화의 결과 공장에서는 적은 노력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노동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손노동이 없어져 여성종업원들의 노동생활이 그대로 흥겨운 노래로, 기쁨으로 되고 있다"고 자랑하며 앞서 지난 1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공장을 찾아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손노동을 없애고 노동자들을 힘겨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北, 13개 경제개발구·신의주 특구 발표(종합)(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각 도(道)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함.
- 중앙통신은 "조선에서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하며 특히 정령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했다"며 "특수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혀 대외개방을 염두에 둔 신의주 특구를 2002년에 이어 다시 개발할 것임을 시사함.



■ 기타 (대내 경제)

-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자들의 종전 같은 기간에 비해 "굴착: 4만 5,000㎡, 성토: 5만 6,000㎡, 콘크리트치기: 1만 1,500㎡ 추가 수행" 선전(11.19, 노동신문 · 평방)
- 신의주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의 "9월 말까지 114.3% 초과 수행" 및 함경북도여단 일꾼들의 "세포등판 축산기지건설" 성과 보도(11.19, 노동신문 · 평방)
- 청진 수지관공장(함경북도)의 연간 '수지관생산 계획 120% 초과 수행' 및 김정수평양방직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새 합숙 건설" 추진 선전(11.19, 중통 · 중방)
- 北, 13개 '경제개발구'(各 道)와 '특수경제지대'(평안북도 신의주시) 설치 최고인민회의 상임궐 정령(11.21) 발표(11.21, 중통)
 -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신의주시 용운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만포시 미타리·포상리),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위원군 덕암리·고성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신평군 평화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송림시 서송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원산시 현동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함흥시 해안구역),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북청군 문동리·부동리·종산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청진시 월포리·수성동·남석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어랑군 용전리),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온성군 온성읍),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혜산시 신장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남도시 영남리)

다. 군사

- 北, 한미훈련 대응 중 사망 해군 '따라배우기' 독려(1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1면에 사설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는 용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자'와 2면 전면에 정론 '생이란 무엇인가'를 실어 이들의 '희생'을 집중 부각함.
 - 신문은 지난달 동해에서 작전 중 숨진 해군장병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면서 모든 주민이 이들의 '삶과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계속 독려하고, 특히 3면에는 사망한 해군들이 쓴 자작시와 노동당원 신청서를 비롯한 유품을 소개하는 등 이들을 칭송하는 글과 사진으로 도배함.
- 北, 20년 만에 軍 '보위일꾼'대회 개최...김정은 참석(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 하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꾼대회가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2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번 대회에 군중·군단 정치위원들, 육·해·항공·반항공·전략로켓트군과 각급 군사학교를 포함한 무력기관 보위일꾼들이 참가했다고 전함.



- **北, 인구 대비 자연재해 규모 세계 10위(1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인구 대비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국가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벨기에 연구소를 인용해 21일 전함.
 - 벨기에 루뱅대학의 재난역학연구소는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13%로 세계에서 10번째로 인구 대비 피해 규모가 큰 나라라고 밝힘.

- **평양과기대, 외국인 단기 강사 구해(1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영국계 여행사인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 (Young Pioneer Tours)'는 이달 18일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평양과기대에서 내년 봄에 가르칠 CS(Computer Science, 컴퓨터공학)와 EE(Electrical Electronics, 전기전자공학) 강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美의 '北 위협론' 비난..."군비증강 구실"(1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등 군비를 강화하는 데 대해 "침략적 목적을 이취보려는 어리석은 놀음"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누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 광고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저들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며 나아가서 우리를 핵으로 압살하려고 있다"고 주장함.

- **北-이집트 문화협조집행계획서 조인(1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이집트가 2013-2015년도 문화협조집행계획서를 18일 평양에서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황호남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만 무스타파 아브두 아흐마드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가 조인식에서 집행계획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 **北, 독일 의사에 명예의학박사학위 수여(1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8일 독일-북한 보건연단회장인 알프레드 홀츠그레프에게 명예의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홀츠그레프 회장이 의학과과학기술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심장 혈관, 흉부, 뇌신경외과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함.



- **북한, 중국기업 투자심리 회복 안간힘(11/19,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 얼어붙은 대북투자 심리를 녹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동시위원회 홈페이지를 인용해 19일 연합뉴스가 전함.
 -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무역성은 지난주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주요 기업인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교류 활동을 벌였으며 북한은 지난 14일 리용남 무역상이 직접 중국 기업인 방문단을 만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힘.

- **北 "텐안면 차량돌진 사건은 테러"...'中 입장'지지(1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 텐안면(天安門) 광장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20일 6면에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0월 28일 중국의 천안문 광장 앞 도로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전함.
 - 베이징의 심장부인 텐안면 광장에서는 지난달 28일 신장(新疆)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위구르인 일가족이 탄 차량이 행인들에게 돌진하면서 폭발해 탑승자를 포함한 40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위구르 독립운동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의 소행이라고 밝힘.

- **또다른 美남성, 지난달부터 北역류중인 듯(종합)(11/20,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 남성을 구속한 채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 베이징발로 보도한 것을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를 억류하고 있어 이번 일이 북한과 미국간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미국인 남성은 고령으로 관광 목적의 비자를 취득한 후 북한에 입국했으며 한국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화물검색 포함(11/20, 미국의소리(VOA))**
 - 중국 정부가 올해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함.
 - 중국은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소형무기와 경무기, 관련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의 대북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유엔 인권결의안 비난…"불신 격화"(11/2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함.
- **러시아 법원, 불법 오징어잡이 北 선장에 유죄판결(11/21, 러시아의소리(VOR))**
 -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영해에서 허락 없이 오징어를 잡은 북한 선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러시아의 소리'(VOR) 라디오 방송이 21일 보도함.
 - 방송은 "러시아 나홋카시 법정이 러시아 경제 수역에서 관련 당국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오징어를 낚시한 조선(북한) 어선 선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조선 선장에게 300만 3천원의 벌금과 생태학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함.
- **北, '中 체포' 탈북자 송환 촉구…"유인납치" 주장(11/21,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기관에 체포된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는 유관국들이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단호히 반대 배격하며 국제법적 요구대로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北, 수산물·목재 합작공장 러 연해주에 제안(1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수산물과 목재 분야의 경제협력을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에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방송은 연해주 정부와 프리마메디아 통신을 인용, 황철남 나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나선경제특구대표단이 이달 21일 연해주에서 빅토르 고르차코프 의회 의장을 만나 나진에 수산물과 목재 가공공장의 합작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힘.
- **스웨덴, 北 역류 미국인 영사방문 추진(1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에 역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관광객 메릴 뉴먼(85) 씨의 영사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스웨덴 외교부 관계자는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뉴먼 씨의 역류 사실을 알고 있다며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뉴먼 씨에 대한 영사방문



을 북한 당국에 신청 중이라고 밝힘.

- **北 노동신문 "美 아시아전략이 지역 평화 위협"(1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평화와 안전보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최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전략을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배주의적인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북 억류 미 관광객, 개성공단 등 일반 관광지 여행(종합)(11/22, 뉴욕타임스(NYT))**
 - 지난달 26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관광객 메릴 뉴먼(85)이 개성공단과 원산 같은 일반 관광지를 여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뉴먼은 함께 북한을 찾은 친구 밥 함들리와 함께 이들 두 지역 외에 남포 등지도 둘러봄.

- **中 국유기업, 북한 경제특구개발 투자서 발빠(11/22,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
 - 중국 대형 국유기업 자오상(招商)그룹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으로 합의한 공동개발특구 투자계획을 철회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함.
 - 중국과 북한은 2011년 북한 북동부의 나선 경제특구와 북서부의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나 황금평 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음.

- **北 "마약범죄 온상은 美...흑색선전 말라"(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2일 서방 언론이 북한을 주요 마약 공급지로 지목한 데 대해 '흑색선전'이자 '정치모략극'이라며 국제 마약 범죄의 온상은 미국이라고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요즘 서방의 어용 보도수단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마약 범죄의 주요 원천지라는 황당무계한 꾀변을 유포시키고 있다"며 그 '출처'로 미국과 남한을 꼽음.

- **北 평양과기대 학생 7명, 영국·스웨덴 유학(11/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남북한 합작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 학생 7명이 영국과 스웨덴에서 유학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RFA는 평양과기대 관계자를 인용해 이 학교 대학원생 3명이 영국 웨스



트민스터 대학에서 전자·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국제금융·경영학)과 스웨덴 옘살라 대학(농업생명과학)에도 각각 2명이 유학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 언론, 북한 경제개발구 계획에 높은 관심(11/23, 연합뉴스; 중국신문사)**

- 중국 언론 매체들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건설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준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개발구 13곳과 신의주의 경제특구 개발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을 소개하며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 신호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힘.

● **北, 국제장애인올림픽위 정회원 자격 얻어(11/24, 연합뉴스)**

- 체육강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운 북한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정식 회원이 됐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IPC는 24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 칠레, 세이셸 등 7개 새 회원을 승인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사 논평】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도청 관련 '개인사신을 비롯한 통신의 비밀을 도청하는 것은 초보적 인권개념도 없는 인권유린행위의 극치'라며 "인권유린의 왕초가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11.5, 중통/세상 못된 짓말 골라하는 인권유린의 왕초)
- 장성택(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11.6 日 국회 참의원(이노키 간지)과 일행·日 체육대학대표단과 담화(11.6, 중통·중방)
- 리종무(체육상), 김성남(당 중앙위 부부장), 마철수(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 신동규(조선체육대학 학장) 등 참가

나. 6자회담(북핵)

● **北 노동신문 "美, 전제조건 내세운 대화 타령 말아야"(1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신문은 이날 '그 무슨 불가침조약체결론의 허황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핵을 대화 마당에 올려놓고 흥정하려 드는 미국의 망발은 달을 보고 짓는 개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난함.



● **中, 6자회담 7개항 조정안 제시…北 사전조치는 제외(11/22, 요미우리(讀賣)신문)**

-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2008년 12월 중단된 회담 재개를 위한 7개항의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함.
- 신문은 회담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함.
- 조정안은 ▲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 이행 ▲ 한반도 비핵화 실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노력 ▲ '행동대 행동' 원칙 유지와 5개 작업부 회의 가동 ▲ 6개국 협의 정례화로 구성됨.

● **美 "北 핵포기 징후없는 6자회담 복귀에 관심 없다"(11/22,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을 방문중인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 뒤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북한의 핵폐기)이 6자회담과 6자회담 프로세스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조선신보 "北, 南이 대화 자격 갖춰야 대화 나설 것"(11/1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8일 "남측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 때까지 북측은 그 어떤 긍정적인 호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함.
- 신보는 이날 '버림받은 불신정권'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청와대 안방주인과 그 측근들이 북이 취하고 있는 대남 강경자세가 일시적인 전술이며 시간이 흐르면 유연한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밝힘.

● **北 대남기구, 반정부 투쟁 호소…"유신부활 막자"(11/20,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20일 남한에서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남한 주민의 반정부 투쟁을 호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황해도 강령군서 연평도 포격 3년 기념모임(11/2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3년을 맞아 황해도 강령군에서 기념모임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전함.
 - 모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담당하는 4군단장인 리성국과 박영호 황해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정룡 황해도 인민위원장과 군장병, 강령군 주민들이 참석함.
 - 리성국 4군단장은 연설에서 미국과 남한 정부를 향해 "연평도 포격전에서 당한 수치스런 참패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조평통,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南 참여' 비난(11/24,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참여한 사실을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남한이 "이번에 또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서 '북인권 결의안' 조작에 앞장서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결의안이 강압 '통과'되자 남 먼저 '환영'이니 뭐니 하면서 설레발을 쳐댔다"고 밝힘.
 - 이어 "괴뢰패당은 미국에 추종하여 인권 문제를 동족대결, 체제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며 한국 정보기관이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유인납치'하고 있다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10월 남북교역량 전년比 80%...개성공단 완만한 회복(11/24, 연합뉴스)**
 -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된 지난달 남북교역량이 예년의 8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24일 통일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남북 교역량은 1억 5천 215만 달러 규모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억8천813만달러의 80.9%에 해당함.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 통일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동족간의 신뢰와 화합이 아니라 대결을 국책으로 삼는 추악한 정체, 우리(北)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공식 선포'라고 연일 비난 공세(11.19, 중통)
- '남한에서 유신독재가 되살아나는 속에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폭압소동이 일고 있다'며 이는 '통치위기 탈피, 장기집권 야망 실현 기도'라고 "전민항쟁에 대중적 궤기" 선동(11.19, 중통 · 노동신문/ 유신독재 부활에 대중적 항쟁으로 맞서야 한다)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라이스 보좌관 "北, 추가도발엔 중대한 비용 치를 것">(11/21, 연합뉴스)
 -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학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앞으로의 추가도발에 대해 중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라이스 보좌관은 "우리(미국)는 분명히 대화에 대해 열려있으며 북한과 양자적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근본적 선택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적 요소들을 계속 가동하면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특히 중국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하도록 압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히고 "우리 자신과 우방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양자 제재와 국제적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 6자회담 7개항 조정안 제시...北 사전조치는 제외>(11/22,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 재개를 위한 7개항의 조정안을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음.
 - 조정안의 내용은 ①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 이행, ②한반도 비핵화 실현, ③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④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⑤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노력, ⑥'행동 대 행동' 원칙 유지와 5개 작업부 회의 가동, ⑦6개국 협의임.
 - 신문은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제안을 두고 줄다리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음.
 - 이어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8일 방북한 우 대표에게 "조정안을 검토하겠다"며 "미국은 협의재개에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템프시 미국 합참의장 "북한 위협이 가장 우려된다">(11/20, WSJ)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템프시 합참의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WSJ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연례 모임에서 아시아 지역



- 의 위험 요인에 대한 질문에 "의도하지 않은 세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이어 템프시 의장은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 수단을 찾으려는 불량 국가"라면서 "북한이 불투명하고, 지도자는 아직도 젊다"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이 초래할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이 적정하게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빅터 차 "北김정은체제 불안요소...안정 판단일러">(11/21, 연합뉴스)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한국 기자들과 CSIS에서 만나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이 내일 붕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체제 불안의 모든 요소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으며, "김정은은 지난 2년간 미사일과 핵 테스트를 했으나 제대로 된 경제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이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음.
- 최근 연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던 차 연구원은 "현재 협상도 안되고 외교적 노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항상 충격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고, 중국도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우려해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그는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절충안 마련 노력에도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서 회담 재개는 어려운 일 같다"고 전망했음.

● <케리 "북한, 매우 골치아픈 선택 계속">(11/2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억류 시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런 것들은 '매우 매우 골치아픈 선택'(very, very disturbing choices)"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음.
- 그는 특히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위험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자로 재가동, 핵 정책 재추진, 인권 침해 등을 거론했음.
- "지금은 북한 스스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미국이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한편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미국 시민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개인정보 보호법(Pivacy Act)을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역류된 미국인은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의 메릴 뉴먼(85)씨라고 밝혀졌음.

다. 중·북 관계

● <中 "변경개방 가속화"...북중무역 탄력받을까>(11/17, 연합뉴스)

- 중국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중국의 경제개혁안에 '변경개방 가속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어 중북 간 경제협력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됨.
- 변경지역 개방 확대는 물론 특정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북한은 중국의 주요한 변경교역 상대국인 만큼 양국의 경제협력 역시 이번 개혁안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북한 신의주의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내년 9월 개통예정이어서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도 중북교역에 호재가 생겼다고 전망했음.

라. 기 타

● <中 "중국 문 앞에서 말썽 일어나는 것 허용안해">(11/22, 연합뉴스)

-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은 지난 19일 열린 '중국 특색사회주의와 중국꿈 선진교육 시리즈 보고회'에서 중국의 '평화발전' 정책을 설명하며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절대로 우리 집 앞에서 난이 일어나고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왕 부장은 "우리는 주변지역의 평화안정 수호를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일관계와 관련 "일본은 마땅히 현실을 직시하고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며 중국의 주권 권익에 손실을 끼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신형대국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前육참차장 "전작권전환, 주한미군 철수 첫수순">(11/18, 연합뉴스)

- 로널드 그리피스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음.
- 그리피스 전 차장은 "미국은 현재 미군 기지를 전체적으로 감축해야 하



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제는 미국 본토의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음.

- 이어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태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태평양 지역에 결정적 국익이 있다고 본다면 주한미군이 하는 일을 선불리 바꾸거나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틸러리 전 주한美사령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찬성">(11/20, 연합뉴스)

-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신 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전환점에 선 한국의 국방' 주제의 라운드테이블 겸 언론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한반도의 상황과 각종 위협, 한국의 방어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언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우선 전작권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데 동의하며, 군사 명령이나 운용, 계획을 생각할 때 특정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음.

● <방위비협상 계속 난항...한미 내달초 회의 속개>(11/20,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8~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와 실무급 협의를 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제8차 협의를 내달 초 워싱턴에서, 제9차 협의를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음.
-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 간 구체적 방법에 있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5년을 주장하지만 우리 측은 3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다만 당초 2천억원 이상 벌어졌던 분담금의 총액 차는 1천억원 대로 줄어들었다고 전해졌음.
- 한편, 한미는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체결해왔으며 2009년에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종료됨.

● <"한·미, FTA 고위급 협의회서 TPP참가 논의">(11/21, 연합뉴스)

- 20일(현지시간)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매체는 "한국 정부가 TPP 참가에 관심이 있으나 참가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최근 TPP 참가 업체들과 FTA 협상을 재개한바



TPP 참가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 대 행의 한국 방문은 오래전 계획된 것으로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당국자, 학계 인사, 전문가들과 만나 광범위한 경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 <차기전투기, 논란 끝에 결국 F-35A로 낙점>(11/22,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차기전투기 작전요구성능(ROC)을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전투기'로 수정, F-35A를 차기전투기 단독 후보로 정했다.
- 당초 군 당국은 경쟁 입찰을 위해 스텔스 성능 조건을 완화했다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시하게 된 것임.
- 국방부 관계자는 F-35A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로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고, 당초 60대에서 40대로 구매 대수가 줄었지만 록히드마틴사와 절충교역을 통해 기존 기술 이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나. 한·일 관계

● <한·중, 북핵대화 재개 위해 "긍정 여건조성 필요">(11/18, 연합뉴스)

-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방한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 및 오찬회동을 하고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 했다고 전했다.
- 두 사람은 한중 양국이 최근 북핵 불용 및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루도록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6자회담 핵심 당사국간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우리 측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변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중국 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함.

● <한-중 FTA '진검승부'는 내년 1월 9차 협상>(11/22, 연합뉴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2일 지난 18일부터 닷새간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한중 FTA 제8차 협상(2단계 첫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양허안과 협정문을 교환했으며, 양국이 덜 민감한 일반품목, 민감품목 리스트부터 교환했다고 밝혔다.
- 내년 1월 개최될 제9차 협상에서는 국내 농가들이 개방을 우려하는 초



민감품목을 양허유보 리스트에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양국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한편, 최근 미국 주도의 거대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 여부가 통상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부는 한중 FTA 타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 <中 방공구역 이어도 상공 포함...KADIZ와도 일부 겹쳐>(11/24, 연합뉴스)

-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의 카디즈와 일부 겹친다"며 "면적은 폭 20km, 길이 115km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 특히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1969년 설정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으나 우리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음.
-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카디즈와 일부 중첩된 것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으며,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 카디즈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어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 한·일 관계

● <「韓日 정상회담 연내 개최 어렵다」>(산케이)(11/19,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내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관해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보도했음.
- 이어 신문은 "최근 한국 언론으로부터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일정 조정 등에 응하려는 분위기가 아직 없다"고 언급했음.
- 산케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반복 비판하고 아베 총리와의 대화거부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정상회담 미개최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평가했음.

● <日 "안중근은 범죄자"...정부 "대단히 유감">(11/19,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방한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안중근 의사 표지석의 원만한 설치 진행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음.
- 그는 특히 "일본은 그동안에도 안중근에 대해 범죄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혀왔다"면서 "일본의 주장을 분명히 한국에 전달하겠다"고 가



지 말했다.

-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이며, 역사를 겸허히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으며,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과잉반응"이라고 맞받았음.
- 이런 가운데,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안 의사 표지석 설치에 협조하는지 묻는 말에 "안중근은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저명한 항일의사"라고 추켜세웠음.

● <정부 "日, 제국주의시대 잘못, 잘 인식해야">(11/19,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3·1운동과 일본 관동대지진 피살자를 포함해 일제 강점시기의 피해자 명부가 새롭게 공개된 것과 관련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가 다시 한 번 나타난 것"이라면서 "그 점을 일본 측에서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 대변인은 이 명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일본에 추가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검토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한편,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징용 및 징병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 청구권 자금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3·1운동 피해자와 간토 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음.

● <日 "한국 동의없이 자위대 한반도 운용 못해">(11/21,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 인사가 우리 측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운용될 수 없고 이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 언급된 안보 관련 고위인사는 제2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행사될 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해졌음.
- 조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우리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日, 독도영유권 주장 정부동영상 홈페이지 신설 발표>(11/22,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모토 이치타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은 22일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이어 야마모토 담당상은 영토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무성, 방위



성 등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종합조정회의를 설치,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 또한 일본 정부가 독도 영토문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영토·주권 유식자 간담회'도 다음 달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음.

라. 미·중 관계

● <북송위기 '쿤밍 탈북자' 미국-유엔 "인권보호">(11/18, 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정부가 중국 공안이 지난 15일 탈북자 13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RFA의 질문에 중국 정부가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로서 해당 국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이번 사건을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해 이를 토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 <中 시진핑 "中美관계 이미 마천루 건설">(11/19, 연합뉴스)

- 중국과 홍콩 언론들은 시 주석은 18일 베이징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미 관계가 여러 차례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해 중미 관계가 이미 마천루를 이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시 주석은 이어 "양측이 정치와 무역, 생태, 문화 교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관련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엇을 감청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성실히 알려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도 자국민에게 무슨 정보를 감청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이비스 "미·중, 대북 비핵화 압박 지속하기로">(11/21,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0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과 북핵문제에 관한 회동을 가졌음.
- 데이비스 대표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 미국은 이전보다 더욱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특히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도록 계속 압력을 행사해 나가는 것에 동의했다"며 양국이 대북 비핵화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음.



-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다웨이 대표는 전날 오후 데이비스 대표와 만찬을 한 뒤 일부 외신기자들과 만나 "회담 재개의 미래를 예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 <중국군, 아태서 미군 우위 위협>(美보고서)<(11/21, 연합뉴스)>

-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당·정의 전폭적 지원 속에 급성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오랫동안 미군이 누려온 우위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음.
- 보고서는 중국군이 아태 지역의 미군기지, 항모, 전투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지적, 아태 지역으로의 미 해군 전력 중심 이동을 지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이어 중국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행위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음.
- 한편,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고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며 "편견과 냉전적 사고가 담긴 보고서는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마. 중·일 관계

● <美, TPP교섭서 수입품 관세 전면 철폐 日에 요구>(11/17,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일본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교섭에서 모든 수입품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미국은 특히 일본이 관세철폐의 예외로 삼고 있는 성역인 쌀, 보리, 설탕, 소·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중요 5개 품목'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예상외 강경 자세에 반발하고 있어 TPP 교섭이 연내 타결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

● <美 "집단지위권은 日고유권한...지역 안보에 기여">(11/20,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은 한국 기자들과 펜타곤에서 만나 "우리는 일본이 집단지위권 관련 해석을 정상화하는 것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더욱더 기여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며, 그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그는 "일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주권 국가로 자신들의 결정"이라면서, "만약 일본이 집단지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선택하면 우리는 지역 내의 역지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일본의 집단 지위권 추구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에 설명과 같은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미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월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 (2+2)에서 표명한 지지보다 표현의 강도 면에서 더 세진 것임.

바. 중·일 관계

● <중국 정보수집기, 이틀 연속 센카쿠 접근>(11/17, 연합뉴스)

- 교통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의 TU-154기 1대가 17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센카쿠 열도 북쪽 약 150km까지 접근한 뒤 서쪽으로 진로를 바꿨다고 발표했다.
- 중국은 전날도 같은 TU-154 정보수집기로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를 지난 센카쿠 북쪽 150km까지 접근했음.
- 방위성은 두 차례 모두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견제를 위해 긴급발진(스크램블)했으나, 중국기가 일본이 영공으로 간주하는 영역에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이에 18일 한 중국의 관련 인사는 CCTV질의를 통해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중국군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으며, 일본이 정보수집기와 센카쿠를 연결하는 것은 이 지역 긴장 분위기를 과장해 군비확장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中, 日경제대표단 방중에 "양국 관계발전에 도움주길">(11/18, 연합뉴스)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부터 7일간 일본 주요기업 경영진 178명의 중국 방문에 대해 "양국 각계의 우호적인 인사들이 중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음.
- 친 대변인은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해양 갈등 문제는 국제법에 근거해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영토주권 수호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 "일본이 국제법 원칙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일본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승리성과와 전후의 국제질서를 견지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음.
- 한편, 중국 경제참고망은 21일 일본 매체를 인용해 일본 대표단은 아직 시진핑, 리커창과 면담이 성사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음.

● <“중-일간 우발적 무력충돌 우려...세계적 재앙될 것”>(11/19, 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기드온 래크맨은 '중국과 일본이 충돌로 향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센카쿠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 2,3위 경제대국의 충돌인 만큼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며, 미일 간 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국제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이어 중일 양국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양국 정부는 그동안 센카쿠를 지키기 위해 무력사용을 천명해 온 수사의 뒷에 간혀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갈등 해소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개설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양국이 서로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 일·러 관계

● <러군용기 연일 日영공 근접 비행...日전투기 긴급발진>(11/18, 연합뉴스)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일본 교도 통신을 인용해 하루 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가 일본 남부 오키나와 섬에서 북부 홋카이도 방향을 따라 일본 영공에 인접한 태평양 상공을 비행했다고 보도했음.
- 러시아 폭격기들이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일본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방어 비행에 나섰으며 러시아 전폭기들은 이후 사할린 쪽으로 기수를 틀었다고 함.
- 일본 자위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영공 인근에 출현하면서 모두 105 차례나 비상 출격했다고 밝혔음.

아. 기 타

● <아베, 동남아서 '적극적 평화주의' 지지 확보>(11/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6~17일 캄보디아, 라오스를 잇달아 순방, 집단 자위권을 아우르는 개념인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지지를 끌어냈음.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7일 라오스에서 통상 탐마봉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행보를 지지받았으며, 전날 캄보디아 훈센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지지를 얻었음.
- 이로써 아베총리는 임기 시작 11개월 만에 아세안 10국을 모두 순방했으며, 오는 12월 13~15일에는 도쿄에서 일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임.
- 아베 총리가 아세안 국가들에 공을 들이는 것은 중국 견제의 틀을 강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 시장을 일본의 성장전략에 활용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해군, 올해 서태평양서 8차례 원양훈련">(11/18, 연합뉴스)

- 남방일보 인터넷판인 남방망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인용해 중국 해군 소속함대가 올해 서태평양에서 총 8차례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음.
- 남방망은 특히 지난달 말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등 3대 함대가 서태평양에서 보름간 진행했던 '기동-5호'훈련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



- 서 중국해군의 첫 번째 원양 대항훈련"이라고 평가했음.
- 중국은 작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해 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격화된 뒤 해군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아베 정권 '일본판 NSC' 이어 '일본판 CIA' 검토>(11/18,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일 일본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지원할 대외정보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아베 정권이 일본판 NSC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한 대외정보기관 설치 구상을 밝힘에 따라 군국주의시대의 '내각정보국'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일본판 NSC 설치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심의가 진행중이며, '여대야소' 구도를 감안할 때 이번이 없는 한 내달 6일까지인 임시 국회 회기 안에 성립될 전망이다.
 - <『中, 신설 국가안전위 '소내각' 수준』>(11/20, 연합뉴스)
 - 20일 대만 연합보 등은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인 중앙편역국의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신설이 결정된 '국가안전위원회'가 국가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작은 내각'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음.
 - 그는 국가안전위에는 당·정·군의 주요 권력 기관의 수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 기구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정책 협조 및 조율, 통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이 기구는 다른 각종 영도소조(지도자급 간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보다 높은 급으로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국 전문가들은 국가안전위원회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속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음.
 - <일본 군사력 증강 '윤곽'...미사일 대응섬 방위 중점>(11/22,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연말에 새로 발표할 방위계획의 대강(신 방위대강)에 탄도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고 섬 지역 방위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이지스함 2척 추가도입, 3천t급 호위함 8대 추가, 미군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와 무인감시기 글로벌호크 도입 계획 등이 유력하며, 특히 규슈에 병력을 집중하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의미로 판단되고 있음.
 - 방어 중심의 정책에서 공격 능력 보유로 이행하는 흐름도 신 방위대강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신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능력' 대신 '종합대응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함.



-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회원된다(자유아시아방송, 11.18)
 -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그리스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정회원으로 승격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오는 22일 그리스에서 총회를 열어 신규 정회원 인준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
 - 북한의 사상 첫 장애인 올림픽 출전을 주선했던 신영순 '푸른나무' 대표는 그리스에서 열릴 총회에 북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대표들이 참석한 다면서 앞으로 올림픽위원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 신 대표는 그리스에서 열릴 국제장애인올림픽총회에 북한 관리 두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
 - 한국과 미국의 민간단체 푸른나무의 주선으로 북한은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대회 수영 종목에 사상 처음으로 선수를 출전시켰으며, 북한 장애인 선수들이 지난달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에 출전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
 -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대회에도 출전 가능성이 높아, 푸른나무는 탁구, 수영, 육상 등의 종목에서 북한 선수를 내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보내기 위해 선수들의 해외 합숙 훈련을 주선하고 장비를 지원할 계획

- 北, 유엔 인권결의안 비난... "불신 격화"(연합뉴스, 11.20)
 - 북한 외무성은 20일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주장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이같이 언급
 - 대변인은 "이런 '결의' 조작놀음은 인권옹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대결과 불신만을 격화시키게 될 뿐"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가소로운 시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

- 北 '불순 영상물' 단속 총력... "엄벌 포고문 재공표"(11.2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른바 '자본주의 불순 영상물'에 대한 강도 높게 단속, 처벌



-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은 20일 "북한 인민보안부(우리의 경찰)가 10월 초 '불순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란 제목의 포고문을 다시 전역에 뿌렸다"고 보도
 - 외부 영상물 단속 강화 차원에서 2004년 12월 나왔던 포고문을 다시 공표
 - 특히 불순 영상물 관련자들을 '계급적 원수'로까지 규정해 공개처형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지난달에는 북-중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계급적 원수들의 준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란 제목의 강연자료를 내려보내 처형된 주민들을 범법자가 아닌 "지주의 손자 등 계급적 원수"로 선전했다고 자유북한방송이 보도
 - 이 강연자료에서 북한은 "얼마 전 국경연선의 어느 한 군(郡)에서 당과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불순녹화물을 유포하던 자들을 체포했다"며 "계급적 원수와 그 족속들이 연산지대(접경지역)에 나타나 자본주의사상과 생활 풍조를 들이밀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
- 유엔 '북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미흡'(11.21, 미국의 소리) [붙임 1]
 - 북한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2-2013 아시아태평양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더디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
 - 항목별로 보면, 5살 이하 어린이 사망률이 1990년 45 명에서 2011년 33.2 명으로 26% 감소하는 데 그쳤고, 신생아 사망률은 1990년 1천 명당 22.9 명에서 2011년 26.3 명으로 오히려 증가
 - 산모사망률도 1990년 10만 명 출산 당 97 명에서 2010년 81명으로 약간 감소했으며, 안전한 식수에 접근 가능한 인구도 1990년 100%에서 2010년에는 98%로 감소
 - 반면 보고서는 저체중 어린이 감소와 출산 시 전문 인력의 참여, 출산 전 임신부 상담, 자연보호구역, 그리고 기본 위생 등 5개 항목에서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설명
 - 한편 하루 소득 1.25 달러 미만 인구 감소, 좋은 일자리 제공, 양성 평등 등의 분야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미평가
 - "北, 기독교 가장 경계박해... 성경 소지만 해도 처벌"(11.21, 크리스천투데이)
 -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주최 '북한인권 사건기록과 인권운동' 세미나가 지난 19일 서울 신촌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개최
 - 세미나에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인권 사건리포트 진행 사항을 소개하던 중, '종교박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 윤여상 소장은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만, 북한 당국은 '종교는 이편'이라는 김일성 교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종교탄압 정책을 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북한 주민들은 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

- 윤 소장은 "특히 기독교는 북한 정권이 가장 경계하는 종교로, 탄압도 가장 심한 편"이라며 "주민들은 단순히 성경책이나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지만 해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실정"이라고 언급

● **미국-호주 장관급협의 '북한 핵 포기, 인권 개선' 촉구(11.21, 미국의 소리)**

- 미국과 호주 정부가 북한에 핵 포기과 인권 개선을 촉구
- 미국과 호주가 연례 장관급협의를 열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으며, 미국에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호주에선 줄리 비숍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존스톤 국방장관이 참석
- 두 나라 장관들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음.
- 장관들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우려하는 국제사회를 대신해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
- 또한 북한에 외국인 납치 등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촉구

● **"북한 세계 마약 제조 중심지로 부상"(11.21, 데일리NK)**

- 북한산 마약을 거래하려던 마약 조직원 5명이 미국 검찰에 의해 전원 기소됐다고 미국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
- 조직원들은 영국·중국·필리핀·슬로바키아 국적으로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미국에 팔아넘기려다가 지난 9월 태국 당국에 체포돼 미국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
- 미국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현금이 부족해 세계 각성제 제조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밝혔으며, 미셸 리온하트 마약단속국(DEA) 국장은 "북한이 세계 마약 거래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주요 공급원으로 떠올랐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

● **"북에 억류된 미국인 남성 한명 더 있어"(11.21, 조선일보)**

-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외에 또 다른 미국인 남성 1명을 지난달부터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
-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년층으로 여행 차 북한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북한 당국은 이 남성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부도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만 설명



- **스웨덴, 북 억류 미국인 영사방문 신청(11.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85세 고령의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를 지난달 26일부터 3주 이상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스웨덴 당국은 미국인의 북한 억류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영사방문(consular visit)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 스웨덴 외교부 관리는 메릴 뉴먼 씨로 밝혀진 미국인의 북한 억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북한 당국에 이 미국인에 대한 영사방문을 신청 중이라고 전달
 - 북한 당국은 아직 스웨덴 측의 뉴먼 씨 면담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스웨덴 외교부 측은 더 구체적인 상황은 미국 국무부에 문의 하라며 추가 언급을 피함.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에 이어 21일에도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을 이유로 뉴먼 씨의 북한 억류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1일 미국 NBC방송에서 방송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북한이 뉴먼 씨 외에도 다른 이들을 억류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 당국에 뉴먼 씨를 석방할 것을 촉구

- **北, 中체포 13명 탈북자 송환요구... '유인납치' 주장(11.22,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난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기관에 체포된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는 유관국들이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단호히 반대 배격하며 국제법적 요구대로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
 - 또한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명백하게 드러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로서 용납 못 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한국 정부를 비난
 -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탈북자들의 복송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날강도적인 궤변"이라고 주장
 - 그는 이어 최근 한국 정보기관과 관련자들이 북한 주민과 자녀를 '유인 납치'하고 그들을 인질로 협박전화를 걸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선포한 대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에 가담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징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北 조평통,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南 참여' 비난(연합뉴스, 11.24)**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참여한 사실을 비난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남한이 "이번에 또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서 '북인권 결의안' 조장에 앞장서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결의안이 강압 '통과'되자 남 먼저 '환영'이니 뭐니 하면서 설레발을 쳐댔다"고



비난

- 이어 "괴뢰패당은 미국에 추종하여 인권 문제를 동족대결, 체제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며 한국 정보기관이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유인납치'하고 있다고 주장
- 조평통은 또 남한이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모략책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

2. 북한인권

- "북한 정치범 수용소, 자유권 침해의 가장 극심한 사례"(미국의 소리, 11.18)
 -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동유럽 공산국가들과 북한의 인권에 관한 국제 학술세미나 '한-유럽연합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 국제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인권 유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폭력 제도의 사례라는 증언이 제기
 - 3년 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주효영 씨는 북한에 있는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면 인간이 아닌, 생산력을 제공하는 도구로서만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수감자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옥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증언
 - 또 다른 발표자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김봉철 부소장은 한국 정부의 계획대로 남북경협이 상징인 개성공단이 국제화된다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
 - 안드레이 타라누 루마니아 국립정치행정대학교 교수는 루마니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자급자족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급자족을 추구하던 루마니아의 행보가 북한과 비슷했으며, 이후 루마니아는 점점 더 빈곤해지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
- "北 인권침해기록, 통일 후 과거청산 위해 필요"(연합뉴스, 11.19)
 - 북한 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19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연세대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사건기록과 인권운동'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한 과거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
 - 한 변호사는 "북한 인권침해기록은 과거청산 과정에 사면이나 형사소추의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피해자에 대한 복권 및 보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
 - 한 변호사는 통일 이후 과거청산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기록보존소는 법무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북 인권 알린다" 온라인 국제 포럼 개최(자유아시아방송, 11.19)

 - 영국의 한 비정부기구 '북한 인권을 위한 유럽 동맹(EAHRNK)'은 온라인 상, 즉 인터넷 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토론회를 다음 주부터 매주 한 차례씩(11월25일, 12월2일, 9일) 3주 동안 열 계획
 - 이를 통해 영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의 북한 인권 전문가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직접 전세계 네티즌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할 예정
 - 이 단체의 마이클 글랜다이닝 대표는 '장소 제약이 없는' 포럼 형식을 통해 전세계인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설명
 - 행사는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정책과 교환, 그리고 국제적인 대북활동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

- 통일연구원, 제네바서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연합뉴스, 11.20)

 - 통일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 강당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제2회 유럽지역 토론회를 개최
 - 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사적인 해"라며 "보고서 제출 이후 주요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북한인권 관련 시안을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
 - 통일연구원 최수영 박사가 '북한의 경제 및 인권 상황', 이금순 박사가 '북한인권상황과 최근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고 휴먼라이츠워치,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의 대표들이 토론
 - 전성훈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해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난해 프랑스에서 포럼을 가진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재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

- 런던서 민주평통 한영 협력포럼 열려(연합뉴스, 11.20)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인권에 대한 한영 협력포럼을 개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실현과 한·영 협력방안을 주제로 런던 밀레니엄 글로스터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임성남 주영 대사, 이정훈 국제인권대사(연세대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
 - 영국 측에서는 리처드 모리스 영국 외무부 태평양담당 국장, 피터 보텀리 보수당 하원의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



- "인권상황 개선하라"...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연합뉴스, 11.20)
 - 유엔은 19일(현지시간)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
 - 유엔은 이날 오후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확정
 -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앞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표결로 채택
 - 다만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은 물론 당사자인 북한은 불참
 -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모든 정치범의 조건없는 즉각 석방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가 핵심 내용
 - 아울러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연좌제, 여성·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
 - 특히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함
 -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
 -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
 -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

- 典 "UN, 北 인권결의안 처리 환영"(11.21, 아이뉴스)
 - 새누리당은 21일 유엔총회가 최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따갑다"며 "남은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
 - 홍문종 사무총장도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정치수용소 폐지, 정치범 석방 촉구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한다"며 "국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



로 이 대학 킬람도서관에서 북한인권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3. 탈북자

- **탈북자 15명 中공안에 체포... 유엔인권이사국 中의 선택은(동아일보, 11.18)**
 - 중국 남부 국경도시인 쿤밍(昆明)에서 탈북자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
 - 17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쿤밍에서 동남아의 한 국가로 가는 버스를 타려다 검거
 - 문제는 탈북자들을 체포한 공안이 쿤밍을 관할하는 윈난(雲南) 성 소속이 아닌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랴오닝(遼寧) 성 소속이란 점이며, 이들 공안은 정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음.
 - 랴오닝 성 공안이 대륙을 종단해 따라와 국경을 넘기 직전 이들을 체포한 것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탈북 루트와 협조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 이번 탈북자 검거 소식은 탈북지원단체들이 중국 내 지인들을 통해 이들의 구명을 시도하다가 "랴오닝 성 공안이 체포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파악
 - 쿤밍은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유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번에 검거된 탈북자가 15명이나 되는 것도 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한 이들이 쿤밍에서 합류했기 때문
 - 이번에 검거된 탈북자들의 성별과 연령, 출신 지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가족단위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미성년자, 영유아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형편
 - 탈북지원단체들은 중국이 국군포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북자를 검거한 뒤 풀어준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중국에 적극적인 외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

- **북송위기 '쿤밍 탈북자' 미국-유엔 "인권보호"(자유아시아방송, 11.19)**
 -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 중국 남부 도시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 13명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했으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이 사안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고려
 -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부당한 탈북자 처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모든 주변국이 탈북자 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국무부 관리가 밝혔으며, 특히 중국에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이 유엔난민기구(UNHCR)에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
 -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담당 세드릭 사페이(Cedric Sapey) 공보담당은 지난 15일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 문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언급



- **탈북지원단체 "탈북자 북송여부 확인중"(자유아시아방송, 11.19)**

 - 지난 15일 중국 남부 국경도시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 13명이 현재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으로 이송돼 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선 이미 북송됐다는 관측도 제기
 - 당초 중국 쿤밍에서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려던 탈북자는 15명이었으나 검거되는 과정에서 2명이 도망치고 13명이 검거
 - 체포된 탈북자 13명은 북송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일부에선 이들이 이미 북송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으며, 한국행을 희망했던 만큼 탈북자들은 무거운 형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른다"며 이번 사건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공식적으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형편

- **정몽준 "쿤밍 체포 탈북자 中랴오닝성 공안에 억류돼"(11.20, 연합뉴스)**

 - 중국 남서부 쿤밍(昆明)에서 최근 체포된 탈북자들이 현재 북·중 국경지대인 랴오닝(遼寧)성 공안에 억류됐다는 주장이 20일 국회에서 제기
 -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랴오닝성 공안에 탈북자들이 억류돼 있는 소식을 아느냐"고 질문
 - 이에 정 총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
 - 정 의원 측은 "중국 쿤밍에서 최근 체포된 탈북자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
 -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랴오닝성 이송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정보를 통보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 신변과 관련해) 특별히 감지되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답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이라고 설명

- **한국 정부, 중국에 탈북자 15 명 강제북송 중단 촉구(11.21, 미국의 소리)**

 - 한국 정부는 최근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
 - 또한 이들과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
 - 하지만 중국 당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이라는 자신들의 탈북자 처리 원칙을 되풀이해 강조하면서 이렇다 할 반응을 보



- 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
- 한편 탈북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들이 현재 랴오닝성 선양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탈북자들 가운데는 8살과 13살, 그리고 16살 먹은 미성년자 3 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
 -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 탈북자를 붙잡으면 곧바로 북한 당국에 연락해 송환을 서두르는 경향이 생겼으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 **中, 윈난성 13명 외에도 이달 들어 탈북자 20여명 체포(조선일보, 11.21)**
 - 지난 15일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탈북자 13명이 체포되기 이전에도 이달 들어서만 탈북자 20여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대부분 북송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에서 탈북 지원 활동을 하는 A씨는 "지난 7일 베이징 부근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탈북자 5명이 공안의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며 체포 하루 만에 북송돼 신의주의 국가보위부에 감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
 - 중국 내 다른 소식통은 앞서 2일에는 선양(瀋陽)에 숨어 있던 탈북자 7명이 공안에 체포되고 비슷한 시기 옌지(延吉), 단둥(丹東)에서도 십여명의 탈북자가 검거돼 양강도 혜산과 함북 칠성 세관을 통해 북한에 넘겨졌다고 언급
 - 북한 내부 소식통은 "최근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주요 국가 위해 사범들과 같은 수준에서 처리하라는 지침서를 일선 공안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안다"고 주장
 - **朴대통령, 첫 방한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연합뉴스, 11.22)**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추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 라오스가 최근 가장 자주 이용되는 '탈북 루트'라는 점에서 두 정상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

4. 이산가족

- **朴대통령 "北 이산가족·3통 신뢰 보여야 더 크게 신뢰"(11.18,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방한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속담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 등에서 신뢰를 보여야 더 큰 문제에서 신뢰를 갖게 될 수 있다"며 "북한



이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 류길재 "통일비용, 국제사회 협력방안 강구해야"(11.19,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간 합의에도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부가 상봉을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
 - 그는 "국군포로 상환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
- 이완영 "이산가족, 남북 어디든 살게 해줘야"(11.20, 뉴스1)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산가족이 어느 쪽이든 거주하고 싶다면 하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
 -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통일을 여는 지름길 중의 하나는 이산가족간에 수시 상호 가정방문을 허용하는 것이다. 진정한 인도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매우 바람직한 말이지만, 현재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1차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의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
 - 이 의원은 또한 "젊은 한류 대중가수의 북한 공연, 예술공연단의 왕래 등 남북한간 체육, 문화 등에서 만남을 확대하고 승인해나가야 한다"며 "민간차원의 경평축구 추진을 지원하는 것도 그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

5. 남북자

- 6·25 남북자가족들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연합뉴스, 11.18)
 -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회)는 6·25전쟁 당시 납북된 인사들을 억류하거나 납북 상태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힘.
 - 가족회는 이달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김 제1위원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할 계획
 - 6·25전쟁 시기 납북과 관련해 북한 지도층이 ICC에 제소되기는 처음
 - 가족회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 전시 민간인 납치 행위를 철저히 부인해왔다"며 "김정은 정권이 과거 전시납북 범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작·은폐하고 있다"고 주장
 - 김 제1위원장 등의 ICC 제소와 관련 법률 지원은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담당



- **납북인사가족회·한변 제네바서 활발한 활동(연합뉴스, 11.20)**
 -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김태훈 변호사와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이미일 회장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전시납북자 35명에 대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제출
 - 김 변호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납북인사 문제가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
 - 김 변호사와 이 회장 일행은 이에 앞서 18일 COI 관계자를 만나 전시납북자 문제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도 거론될 수 있도록 강력한 논조로 보고서를 작성해줄 것을 촉구

- **신안군,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11.19, 뉴스1)**
 -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 납북돼 억류나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
 -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경우
 -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신고인의 신안군청 행정지원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방문 신청

6. 국군포로

- **국내 봉환 국군포로 손동식씨 유해... 딸 손명화씨와 DNA 일치 확인(동아일보, 11.23)**
 - 9월 북한에서 최초로 온전한 상태로 반출돼 국내로 봉환된 국군포로의 유해가 유전자(DNA) 감식 결과 유족의 주장대로 국군포로 손동식 씨(1925년생)인 것이 공식 확인
 - 손 씨의 딸인 손명화 탈북민복지연합회장은 22일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방부로부터 유전자 감식 결과 통보서를 전달받았다"고 설명
 - 손 회장은 북한 내 친척과 지인들을 통해 아버지의 유해를 중국으로 반출한 뒤 지난달 국내로 봉환했으며, 유골은 이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옮겨져 DNA 검사를 비롯한 확인 절차를 거침.
 - 국방부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에 따라 손 씨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



7. 대북지원

- **카리타스, 북 온실 사업 순조롭게 진행(11.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카리타스의 북한 내 온실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 최근 카리타스의 북한지원팀이 북한을 다녀온 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온실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카리타스가 짓고 있는 온실은 길이 40미터, 폭 8미터의 크기로, 평안북도에 한 동, 황해북도와 강원도에 각각 두 동씩, 함경남도에 세 동, 함경북도에 네 동, 그리고 평양시에 다섯 동 등 모두 열일곱 동이 건설 예정
 -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온실은 버섯재배와 돼지사육 등 다용도 목적으로 이용할 예정
 - 카리타스의 볼프강 게스트너 대북사업담당관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스무 동의 온실을 북한에 건설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각종 채소를 북한의 결핵 및 간염환자 치료시설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카리타스는 이달 초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본 뇌염 예방접종도 함께 실시
 - 이번 예방접종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실시한 것으로 주로 평안남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게스트너 대북사업담당관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은 내년 초까지 이뤄질 계획이라고 언급
- **캄보디아 NGO, 올해 두 차례 대북지원(자유아시아방송, 11.22)**
 - 캄보디아의 민간 구호단체인 사회통합개발봉사단(Society Integration Development Organization: SIDO)는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식량과 의료, 재난대비 분야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성공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
 - 이 단체의 북한 지원 책임자인 마이클 님(Michael Nhim) 박사는 봄과 가을 두 차례 대북지원활동을 위해 지난달 재해와 식량 전문가 9명이 북한을 방문해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대비 교육과 물막이 시설과 대피소 건설, 그리고 비상식량 비축 등의 지원했다고 설명
 - 님 박사는 지난 5월에 캄보디아 단체로는 처음으로 대북지원을 시작했 다면서 앞으로 3년간 북한에서 지원활동을 계속한다고 지적

8. 북한동향

- **국정원 · 외교부 · 통일부 등이 '우리(北)에 대한 정탐 · 모략행위와 동족납치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다'며 '이는 히스테리적 발광으로 내부 혼란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주장(11.18, 평방/광란적으로 벌어지는 반공화국 모략책동)**



- 국정원·외교부·통일부 등이 '우리(北)에 대한 정탐·모략행위와 동족납치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다'며 '이는 히스테리적 발광으로 내부 혼란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주장(11.18, 평방/광란적으로 벌어지는 반공화국 모략책동)
- 【「조국전선」 중앙위 호소문(11.20)】 우리 정부가 '통진당, 범민련 남측본부, 전교조, 전공노 등 민주 및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며 보수·유신독재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하려 한다'며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 투쟁' 선동(11.20, 중통)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1.21)】 탈북자 15명 中 공안에 체포(중국 쿤밍) 관련 '南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 행위로 용납 못할 반인류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유관국들에 '탈북자 송환' 촉구(11.21, 중통) 【「조국전선」 중앙위 호소문(11.20)】 우리 정부가 '통진당, 범민련 남측본부, 전교조, 전공노 등 민주 및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며 보수·유신독재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하려 한다'며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 투쟁' 선동(11.20, 중통)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1.21)】 탈북자 15명 中 공안에 체포(중국 쿤밍) 관련 '南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 행위로 용납 못할 반인류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유관국들에 '탈북자 송환' 촉구(11.21, 중통)



[붙임 1] ESCAP, ADB, UNDP, Asia-Pacific Aspirations: Perspectives for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sia-Pacific Regional MDGs Report 2012/13.

Appendix

Technical Note 3: Selected MDG Indicators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1.25 per day poverty (%)		Country line poverty (%)		Underweight children (% under age 5)	
	Earliest	Latest	Earliest	Latest	Earliest	Latest
East and North-East Asia						
China	60.2 (90)	11.8 (09)	6.0 (96)	4.6 (98)	12.6 (90)	3.6 (10)
Hong Kong, China
Macao, China
DPR Korea	55.5 (98)	18.8 (09)
Republic of Korea
Mongolia	38.7 (10)	27.4 (12)	11.0 (92)	4.7 (10)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44.5 (94)	18.6 (09)	53.2 (04)	20.5 (11)	42.6 (96)	28.3 (10)
Indonesia	54.3 (90)	16.2 (11)	17.6 (96)	12.0 (12)	29.8 (92)	17.9 (10)
Lao PDR	55.7 (92)	33.9 (08)	45.0 (92)	27.6 (08)	39.8 (93)	31.6 (06)
Malaysia	1.6 (92)	0.0 (09)	12.4 (92)	1.7 (12)	22.1 (90)	12.9 (06)
Myanmar	32.5 (90)	22.6 (09)
Philippines	30.7 (91)	18.4 (09)	24.9 (03)	26.5 (09)	29.9 (90)	20.7 (08)
Singapore	3.3 (00)
Thailand	11.6 (90)	0.4 (10)	58.1 (90)	13.2 (11)	16.3 (93)	7.0 (06)
Timor-Leste	36.3 (01)	49.9 (07)	40.6 (02)	45.3 (10)
Viet Nam	63.7 (93)	16.9 (08)	...	20.7 (10)	36.9 (93)	11.7 (11)

Appendix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Primary enrolment ratio (%)		Reaching last grade (%)		Primary completion rate (%)	
	Earliest	Latest	Earliest	Latest	Earliest	Latest
East and North-East Asia						
China
Hong Kong, China	93.03 (01)	97.23 (11)	99.33 (02)	99.43 (10)	96.66 (01)	91.28 (11)
Macao, China	85.61 (99)	87.26 (08)	98.07 (08)	98.27 (09)	100.33 (99)	97.09 (08)
DPR Korea
Republic of Korea	99.33 (99)	98.87 (10)	99.22 (99)	99.28 (09)	104.48 (99)	101.23 (10)
Mongolia	89.62 (99)	98.79 (11)	87.22 (99)	92.84 (10)	85.81 (99)	115.29 (11)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97.12 (03)	96.58 (10)	121.12 (99)	119.53 (11)
Cambodia	86.94 (99)	98.25 (11)	54.74 (00)	61.34 (10)	40.89 (99)	89.91 (11)
Indonesia	93.96 (00)	98.99 (11)	85.89 (01)	88.00 (10)	92.74 (01)	107.80 (11)
Lao PDR	77.21 (99)	97.35 (11)	54.57 (99)	68.02 (10)	71.02 (99)	92.61 (11)
Malaysia	95.14 (99)	95.89 (05)	97.14 (02)	99.24 (09)	94.97 (99)	98.96 (05)
Myanmar	55.22 (00)	74.79 (09)	74.14 (99)	103.60 (10)
Philippines	89.82 (99)	88.71 (09)	75.25 (01)	75.78 (08)	87.04 (99)	91.57 (09)
Singapore	98.68 (08)
Thailand	93.61 (06)	89.68 (09)	87.62 (99)
Timor-Leste	66.84 (05)	90.93 (11)	74.17 (08)	83.56 (10)	79.01 (08)	72.49 (11)
Viet Nam	97.89 (99)	99.42 (11)	82.82 (99)	93.78 (10)	98.18 (99)	104.27 (11)

South and South West Asia



Appendix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Gender parity index in primary		Gender parity index in secondary		Gender parity index in tertiary	
	Earliest	Latest	Earliest	Latest	Earliest	Latest
East and North-East Asia						
China	1.03 (01)	1.04 (11)	0.95 (01)	1.05 (11)	0.83 (03)	1.13 (11)
Hong Kong, China	0.97 (99)	1.04 (11)	0.98 (01)	1.02 (11)	1.00 (03)	1.10 (11)
Macao, China	0.99 (99)	0.98 (08)	1.05 (99)	0.92 (11)	0.73 (99)	0.97 (11)
DPR Korea
Republic of Korea	1.01 (99)	0.99 (10)	1.00 (99)	0.99 (10)	0.60 (99)	0.72 (10)
Mongolia	1.01 (99)	0.98 (11)	1.26 (99)	1.06 (11)	1.84 (99)	1.49 (11)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0.95 (99)	1.01 (11)	1.09 (99)	1.02 (11)	1.89 (99)	1.69 (11)
Cambodia	0.87 (99)	0.95 (11)	0.53 (99)	0.85 (08)	0.33 (00)	0.62 (11)
Indonesia	0.97 (00)	1.02 (11)	0.95 (00)	1.00 (11)	0.88 (00)	0.87 (11)
Lao PDR	0.85 (99)	0.94 (11)	0.70 (99)	0.85 (11)	0.49 (99)	0.74 (11)
Malaysia	0.98 (99)	1.00 (05)	1.08 (99)	1.07 (10)	1.02 (99)	1.34 (10)
Myanmar	0.98 (99)	1.00 (10)	1.00 (99)	1.06 (10)	1.38 (07)	1.37 (11)
Philippines	1.00 (99)	0.98 (09)	1.10 (99)	1.08 (09)	1.27 (99)	1.24 (09)
Singapore
Thailand	0.97 (99)	0.99 (09)	0.98 (01)	1.08 (11)	1.17 (99)	1.31 (11)
Timor-Leste	0.93 (04)	0.96 (11)	0.98 (04)	1.03 (11)	1.24 (02)	0.70 (09)
Viet Nam	0.93 (99)	0.94 (11)	0.76 (99)	1.01 (11)

Appendix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Under-5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1990	2011	1990	2011
East and North-East Asia				
China	48.9	14.6	38.7	12.6
Hong Kong, China
Macao, China
DPR Korea	45.0	33.2	22.9	26.3
Republic of Korea	7.5	4.8	6.4	4.1
Mongolia	106.5	30.7	76.1	25.5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12.3	7.2	9.2	5.6
Cambodia	116.7	42.5	85.1	36.2
Indonesia	81.6	31.8	54.1	24.8
Lao PDR	147.7	41.9	102.1	33.8
Malaysia	17.2	6.5	14.8	5.6
Myanmar	107.4	62.4	76.7	47.9
Philippines	57.0	25.4	40.2	20.2
Singapore	7.5	2.6	6.1	2.0
Thailand	35.0	12.3	28.8	10.6
Timor-Leste	180.0	54.1	135.0	45.8
Viet Nam	49.9	21.7	36.1	17.3

Appendix

Goal 6: Combat HIV and 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HIV prevalence (% ages 15-49)		TB incidence rate (per 100,000)		TB prevalence rate (per 100,000)	
	1990	2009	1990	2010	1990	2010
East and North-East Asia						
China	...	0.1 *	153	75.0	215	104.0
Hong Kong, China	127	78.0	163	99.0
Macao, China	89	73.0	115	94.0
DPR Korea	344	345.0	768	422.0
Republic of Korea	0.1 *	0.1 *	167	100.0	223	149.0
Mongolia	0.1 *	0.1 *	405	223.0	934	348.0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71	70.0	90	89.0
Cambodia	0.5	0.6	580	424.0	1,667	817.0
Indonesia	0.1 *	0.3	206	187.0	445	281.0
Lao PDR	0.1 *	0.3	492	213.0	1,490	540.0
Malaysia	0.1	0.4	127	81.0	227	101.0
Myanmar	0.2	0.6	393	381.0	894	506.0
Philippines	0.1 *	0.1 *	393	270.0	1,003	484.0
Singapore	0.1 *	0.1	63	37.0	79	46.0
Thailand	1.0	1.2	138	124.0	199	161.0
Timor-Leste	498 (02)	498.0	834 (02)	701.0
Viet Nam	0.1 *	0.5	204	199.0	403	323.0



Appendix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orest cover (% land area)		Protected area (% territorial area)		CO ₂ emissions (kg CO ₂ per \$1 GDP (PPP))	
	1990	2010	1990	2010	1990	2009
East and North-East Asia						
China	16.7	21.9	13.05	16.12	1.9695	0.9084
Hong Kong, China	41.15	41.88	0.2019	0.1206
Macao, China	0.1304	0.0329
DPR Korea	68.1	47.1	1.56	1.66
Republic of Korea	64.5	63.0	3.91	5.26	0.5061	0.4290
Mongolia	8.0	7.0	4.10	13.78	1.8814	1.1537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78.4	72.1	24.76	29.58	0.5054	0.5046
Cambodia	73.3	57.2	0.03	23.76	0.0612 (93)	0.1502
Indonesia	65.4	52.1	3.93	9.05	0.4040	0.4657
Lao PDR	75.0	68.2	1.47	16.68	0.0594	0.1307
Malaysia	68.1	62.3	12.81	13.93	0.4521	0.5570
Myanmar	59.6	48.3	2.45	5.97
Philippines	22.0	25.7	2.88	5.06	0.2656	0.2457
Singapore	2.9	2.9	2.47	3.39	0.6105	0.0510
Thailand	38.3	37.1	10.51	16.41	0.4269	0.5568
Timor-Leste	65.0	49.9	1.71 (00)	6.25	0.1842 (02)	0.1236
Viet Nam	30.2	44.5	3.00	4.72	0.3584	0.6011

Appendix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Skilled birth attendance (%)		Antenatal care (≥ 1 visit) (%)	
	1990	2010	%		%	
			Earliest	Latest	Earliest	Latest
East and North-East Asia						
China	120	37	94.0 (90)	99.6 (10)	69.7 (92)	94.1 (10)
Hong Kong, China
Macao, China
DPR Korea	97	81	96.7 (00)	100.0 (09)	97.1 (00)	100.0 (09)
Republic of Korea	18	16	98.0 (90)	100.0 (97)
Mongolia	120	63	93.6 (98)	99.8 (11)	89.8 (98)	99.0 (10)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29	24	98.0 (94)	99.9 (09)	100.0 (94)	99.0 (09)
Cambodia	830	250	34.0 (98)	71.0 (10)	34.3 (98)	89.1 (10)
Indonesia	600	220	31.7 (91)	79.4 (07)	76.3 (91)	92.7 (10)
Lao PDR	1,600	470	19.4 (00)	20.3 (06)	26.5 (01)	35.1 (06)
Malaysia	53	29	92.8 (90)	98.6 (09)	73.6 (03)	90.7 (09)
Myanmar	520	200	46.3 (91)	70.6 (10)	75.8 (97)	83.1 (10)
Philippines	170	99	52.8 (93)	62.2 (08)	83.1 (93)	91.1 (08)
Singapore	6	3	...	100.0 (98)
Thailand	54	48	99.3 (00)	99.5 (09)	85.9 (96)	99.1 (09)
Timor-Leste	1,000	300	25.8 (97)	29.3 (10)	70.9 (97)	84.4 (10)
Viet Nam	240	59	77.1 (97)	92.9 (11)	70.6 (97)	93.7 (11)

Appendix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afe drinking water (% population)		Basic sanitation (% population)	
	1990	2010	1990	2010
East and North-East Asia				
China	67	92	24	65
Hong Kong, China
Macao, China
DPR Korea	100	98	53 (92)	82
Republic of Korea	90 (91)	98	100	100
Mongolia	54	85	50 (94)	53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31	67	9	33
Indonesia	70	84	35	59
Lao PDR	40 (94)	70	20 (94)	62
Malaysia	88	100	84	96
Myanmar	56	84	55 (91)	77
Philippines	85	92	57	74
Singapore	100	100	99	100
Thailand	86	96	82	93
Timor-Leste	53 (95)	69	37 (95)	39
Viet Nam	58	96	37	75